

바이오는 정읍 세계로 바이오 Innovation 세미나

‘융합과 도약’ 정읍 바이오산업의 새 흐름을 만든다…7개 주요 연구기관 60여 명 참석

정읍시가 ‘융합과 도약’을 주제로 ‘정읍 바이오 이노베이션(Innovation)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읍의 바이오산업 성장을 꾀하고 기관 간 협력 생태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개 주요 연구기관 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유호연 부시장을 비롯해 전북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 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소재부품장비연구센터, (재)농축산유통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진흥센터 등 지역 주요 연구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각 기관의 실무연구자들이 기관별 중점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와 기술 연계를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섰다.

이어 열린 2부에서는 기정서 미래산업과장의 ‘정읍시 바이오산업 추진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전북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유진혁 본부장의 ‘딥테크 기술사업화와 IP투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정병엽 소장의

‘융합 연구소기업 설립 진행사항’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이오는 정읍에서 세계로(Jeongeup to Global, Pioneering Next Biotechnology)’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정읍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

시는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참여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연구·기업·창업이 선순환하는 정읍형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영임 기자

김제 K-종자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

오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국비 1,683억 원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글로벌 종자 생산·물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하며 농업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김제시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기후위기 및 선진국의 첨단육종 투자 확대 등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종자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차에 걸친 사전용역을 통해 사업 실행 가능성을 높여왔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8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정책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향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백산면 민간육종연구단지 인근 구광항부지에 첨단정밀육종연구센터, K종자비즈니스센터, 스마트온실 등 첨단연구·R&D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새만금 종자생명단지에 스마트 유통센터, 종자기업에 임대·분양해 글로벌 종

자 생산·물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김제시를 국내 종자산업의 연구·생산·유통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스마트 농업·바이오 기술·글로벌 네트워크가 융합된 농업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738억 원 중 국비 1,683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를 K-종자의 심장으로 성장시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서주 기자

광주시, 수능 종합 지원…교통상황실 가동한다!

광주광역시에는 광주시교육청, 광주경찰청, 소방안전본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 지원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편안하고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렸으며, ▲교통 소통 원활화 ▲119 구급 대응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자연재해 대비 ▲안전사고 예방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먼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은 시험 당일 ‘수능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오전 6시부터 7시30분까지 38개 주요 노선에 시내버스를 80회 증편 운행한다. 각 시험장 주변 교통지도에 자치구·모범운전자회 등 490여 명을 투입하고,

장애인·거동 불편 수험생을 위해 교통약자 전용택시 무료 수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도 수험생 긴급 수송에 순찰차 69대와 오토바이 6대를 동원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월13일부터 11월7일까지 시험장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제거하기 위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시험 당일 시험장마다 전문 구급 자격자를 배치해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소음 방지를 위해서는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시험장 주변 공사장을 점검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소음 최소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영어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10분~1시35분)에

는 시험장 주변 생활·교통 소음을 통제한다.

기상 악화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유관기관이 함께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지진가속도계 및 예·경보시스템을 점검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험 종료 후에는 총장로·상무지구 등 변화가를 중심으로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청소년 쉼터·상담복지센터 등과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3일 광주지역 40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실시한다.

손권일 기자

5개 시·군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반영건의



전북 군산·부안·고창, 전남 영광·함평 등 서해안 5개 시군 단체장이 5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김임준 군산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이상의 함평군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서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남·북 도지사 및

5개 시군 공동건의문과 10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사업은 한반도 U자형 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연결 구간이다. 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총연장 110km, 사업비 4조7919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철도사업이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서해안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 △국가 균형발전 촉진 △새만금, 한빛원전, 대규모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등 서해안권 산업·관광 활성화의 핵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전북권 철도망 구축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해안철도 건설 시 생산유발 8조 8000억원, 고용유발 4만2000명, 이동시간 78분 단축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날 국토부 장관 면담에서 서해안철도 건의와 함께 ‘노을대교의 조기 착공’과 ‘국도 23호선 고창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반영도 함께 건의했다.

고창-부안을 연결하는 노을대교는 서해안권 교통망의 핵심 연결축으로, 조기 착공 시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관광·물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창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도심 내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핵심 도로 인프라로, 고창읍 내 교통 혼잡 완화와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꼽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서해안철도와 고창을 우회도로가 함께 추진된다면, 고창은 전북 서남권 교통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임 기자

묘도 LNG 허브터미널 탱크지붕 상량식

여수시, 1조 4천억 원 규모…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경쟁력 강화 기대



전라남도는 지난 5일 여수 묘도에서 1조 4천억 원 규모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탱크 지붕 상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경쟁력 강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상량식은 지난해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후 본격 착공에 들어간 터미널의 주요 공정인 LNG 탱크 지붕 설치를 기념하는 행사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철현 국회의원,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최정기 여수부시장, 문갑태 여수시의회 부의장과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LNG 저장탱크 상부의 탱크 지붕 체결 과정을 스크린으로 지켜보며 사업의 진척 상황을 확인했다.

‘여수 묘도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은 여수 묘도 간척지(약 8만 3천 평)에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LNG 저장

탱크 3기, 10만 톤급 전용 항만, 수송배관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은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이자 정부 지정 ‘기회발전특구’에 전국 최초 투자 실현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7년 말 완공해 2028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2047년까지 20년간 여수·광양만권 산업단지에 연간 300만 톤 규모의 산업용·발전용 LNG를 기존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에너지 원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수·광양만권 지역에 생산유발효과 2조8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1만3천 명에 달하며, 여수시는 지방세가 매년 30억 원 씩 20년간 안정적인 세입 확보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김영록 도지사는 축사에서 “그동안

많은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사고 없이 이 시점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LNG 허브터미널 공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완수돼 여수·광양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BS한양, GS에너지㈜, 전남도, 여수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간 주주협약을 했으며, 전남도와 여수시의 230억 원 출자를 기반으로 정부펀드 및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성공적으로 조달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전남 쌀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보성군농협 통합RPC 시설현대화가 완공돼 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철우 보성군수, 이동현·김재철 전남도의원,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보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시설현대화사업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추진됐다.

총사업비 149억 원이 투입됐다. 총 부지면적은 1만 927㎡(3천305평), 건축면적은 4천499㎡(1천362평)이며, 하루 80톤의 가공 능력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품질 쌀 유통체계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덕현 기자

탄소·수소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나선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완주수소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완주군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완주수소연구원과 손잡고 탄소·수소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소경제도시 도약과 친환경 산업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5일 완주군은 유희태 완주군수,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대행, 이흥기 완주수소연구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수소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기업 기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완주군이 추진 중인 수소경제도시 전략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 소재 기술과 수소에너지 실증역량을 결합해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탄소·수소 융·복합기술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추진 ▲지역기업 기술지원 및 상용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 ▲국가공모사업 공동 대응 등으로, 각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완주군은 수소용품검사지원

센터, 수소전기상용차 실증사업, 수소버스 및 충전소 구축, 수소연료전지 실험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소산업의 실증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완주수소연구원 설립을 통해 연구·시험·교육 기능을 아우르는 실증체계를 완성하고, 정부의 수소특화단지 유

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완주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위기를 기회로 산불 피해 산물 자원화 협약 체결

무주군은 지난 5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주군산림조합(조합장 박철수), 남원산림조합(조합장 허운영), ㈜유니드비티플러스(대표 한상준)와 ‘산불 피해 산물 자원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3월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면적: 232.8ha, 주요 피해 수종: 참나무, 소나무류)로 인해 훼손된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조속한 복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은 이들 기관 및 업체와 △무주군 내 산림 자원 및 산물 피해목 자원화를 위한 공동 업무를 수행하고 △산불 피해 산물의 생산·공급·복구, △산

도 산림경영단지 등 기타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황인홍 군수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구축이 산불 피해 지역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산불 피해목의 활용 증대와 산림 자원의 이용, 목재산업 활성화, 나아가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까지 전회위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산불 피해 산물을 목재나 에너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자원화하는 데 협력한다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협력 기반을 조성해 ‘자산지소(地産地

消)’형 모델을 구축할 방침으로, 산불 피해 지역 복구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벌채를 시작하고 내년 3월부터는 조림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6월 관련 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산불 피해 규모와 처리계획 등을 공유한 바 있다. 화에 대응하는 산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산불 피해목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무주사랑상품권의 안전한 발행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김서주 기자